

# 세계도시

2006. 10. 2 제152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관리

### 도시경영·경제

1. '올해의 시드니市 우수업체' 시상 (시드니)
2.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토론 참여와 의견 제시 (동경)
3. 인력난 해소 위해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호주)
4. 다양한 언어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 디지털 도시

5.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와 지역 문화행사 연계 서비스 제공 (영국 웨이크필드市)

### 복지·문화

6. 복지서비스에 대해 제3자 평가제 도입 (일본 아이치縣 헤키난市)
7.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승인 (미국 오�클랜드市)
8. 사회융합과 가난 타파를 위한 '사회소외 예방팀' 설립 추진 (영국)
9. 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 연습 행사 개최 (베를린)
10. 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집행,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아 (영국)

### 도시환경

11.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지도 작성 (영국)
12.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미국 오�클랜드市)
13. 최신 환경규제 적합차량의 조기 시장 투입 요청 (동경)

### 도시교통

14.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환 프로젝트 'Smart Travel Sutton' 시작 (런던)
15. 런던교통공사, 당초 버스 승차권 인상률의 1/3만 인상 (런던)
16. 市의회, 템스강의 교통기여도 제고 촉구 (런던)
17.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방안 발표 (베를린)

### 도시계획·건설·주택

18. 경관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법 강화 필요성 대두 (영국)
19.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토지소유 계획안' 제안 (영국)
20. 도시 재개발이 이웃지역에 악영향 (영국)
21. 주요 거리 정비 사업 실시 (파리)
22. 쿼리 대학에 새로운 아트리움 건물 완공 (파리)

## 벤치마킹 사례

###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관리

#### 〈주요 내용〉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1873년 16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미국 최초의 대형 도시공원이다. 150년의 역사를 가지며 현대 도시공원의 시발점이자 대명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101만 평의 장방형 부지에 숲(16만 평)과 녹지(연못·저수지 18만 평, 잔디밭 30만 평)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연공원에 가깝다. 시설은 미술관, 어린이 동물원, 정원,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최소한도로 설치됐다. 이용객은 연간 2500만 명(하루 10만 명)으로 공원 이용객의 대부분(75%)은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이다.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1840년대 뉴욕 맨해튼의 급격한 도시화로 업무나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면서 공원녹지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기에 한 민간인(W.C. Bryant: New York Post 편집자, 자연주의 시인)의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원 조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1858년 뉴욕주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뉴욕시는 공원계획안을 현상 공모했는데,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칼베르 보(Calvert Vaux)의 'Greensward Plan'이 당선됐다.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2004년 촬영)



센트럴파크 안의 호수쪽에서 바라본 공원경계지역. 특별지구로 지정해 기존 건물높이 64m내외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2004년 촬영).

공원 소유권은 뉴욕주가 가졌지만 실제 공원 조성 및 비용은 뉴욕시가 맡아 단계적으로 조성됐다. 공원 북측지역은 20세기 초에 추가됐다. 공원 조성 후 15년이 지나 수목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시민의 공원입장을 허용할 정도로 공원화사업은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황폐화되면서 관리문제가 대두됐다. 뉴욕시는 CPC(Central Park Conservancy)라는 민간파트너십을 도입해 이 문제에 대응했다. 이 기구는 민간기부금으로 관리비용의 80%를 조달하며 나머지는 뉴욕시가 부담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부금액에 따라 뉴욕시의 보조금도 증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 기구의 활동으로 공원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1980년대에는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다.

또한 뉴욕시는 공원 주변지역의 고층 고밀개발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특별지구(Special Park Improvement District)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관리의 기본방향은 공원의 휴식기능(쉼터)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층개발과 차량 출입을 억제하고 휴먼스케일의 보행중심 경관 형성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해설 및 평가〉

센트럴파크는 세계적인 고밀도시에 자연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101만 평에 이르는 부지 대부분을 자연녹지공간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원관리에 있어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독특한 기부문화에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기부금이라는 시민 재원으로 공원이 관리된다는 점은 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원 모델 창조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공원과 도심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 주변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원 남측지역에 대한 특별지구 지정을 통해 고층개발, 무분별한 상업화, 자동차에 의한 보행환경 훼손 등을 억제하기 위해 세심한 도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에도 대규모 공원으로서 독섬 서울숲과 월드컵공원 등이 있지만 센트럴파크와 같은 맥락의 기존 시가지 내의 도심형 공원은 ‘용산민족공원’(이하 용산공원)이 될 것이다. 현재 용산기지의 공원화로 주변지역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 개발계획상 주요 업무로 설정된 공원 남측지구 또는 공원 경계지역의 개발이 경관, 조망 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관리 원칙과 방향이 검토 중에 있다.

### 〈벤치마킹 시행방안〉

용산공원의 계획수립권은 정부에 있으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서울시는 사전에 공원 주변지역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이나 공원조성 방향에 대한 방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원조성 방향으로 센트럴파크처럼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 설치보다는 풍부한 자연환경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하다. 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능 측면에 있어 과도한 상업 개발보다는 문화 또는 양호한 주거공간, 도시설계 측면에 있어 기존 도시맥락과 조화를 중시하며 휴먼스케일의 보행 중심 가로환경 등 공원 주변지역 도시 또는 가로경관에 대한 원칙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공원 조성 후 관리주체를 센트럴파크의 CPC 같이 민관파트너십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벤치마킹 기대효과〉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용산권은 도심과 연계해 세계적인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입지여건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될 것이므로 용산공원의 기능과 역할도 뉴욕시의 센트럴파크와 유사하리라 예상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개발을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용산공원이라는 대규모 어메니티의 독점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공원관리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용산공원화 사업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박현찬 도시설계팀장(hcbahk@sdi.re.kr)

## 1. ‘올해의 시드니市 우수업체’ 시상 (시드니)

2006년 9월 14일 3회째를 맞은 시드니市 우수업체상(City Business Awards) 시상식에서 ‘올해의 시드니市 최우수업체’로 VIVO 레스토랑이 선정됐으며, 패션, 음식, 광고, 미용, 호텔, 갤러리, 부동산 등 총 28개 분야에서 분야별 우수업체가 선정됐다. 시드니市 우수업체상은 규모와 형태에 관계 없이 시드니市에 소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과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된다. 올해에는 최종심사까지 오른 1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후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www.sydneymedia.com.au)

###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은 1억 원 정도의 예산(2006년)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던 ‘서울기업대상 시상제’(서울市 산업국 업무계획 참조)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우수경영 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도의 주된 취지긴 하나 운영에 따라서는 사업 효과가 불확실해질 소지가 큰 제도이다. 따라서 시드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업체의 참여와 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특성화 분야별로 시상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다단계 사전심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시상금 액수도 상향조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외홍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 2.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토론 참여와 의견 제시 (동경)

동경都 다치가와(立川)市の 청년회의소가 ‘市의회와 시민의 관계’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참여를 위해 시내 약 500세대의 우편함에 안내문을 넣은 결과 시민 13명이 참석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시민토론회의 사례금은 1만 엔(약 8만 원)이었다. 청년회의소는 공청회처럼 공모를 통해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도 좋지만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마련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평소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市의회의 현황을 설명한 후 ‘의회와 시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길’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동경都 미타카(三鷹)市도 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주민등록표에서 무작위로 뽑은 1000명에게 우편물을 보낸 결과 참가 의사를 표한 사람은 87명이었다. 그 중에서 다시 추첨을 통해 52명이 선발돼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러한 시민토론회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모델이 됐다. 일본에서는 2005년에 동경 청년회의소 치요다(千代田)區 위원회가 개최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러한 토의민주주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첨하게 되는데 출석률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의제 설정에 따라 주최자의 의도대로 토론 방향이 유도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정책결정 통로와의 관계 정립 문제가 있다. 시민토론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여론조사보다는 토론을 통해 얻은 의견이 제시된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朝日新聞, 2006. 9. 7)

## >>> 전문가 검토의견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경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 시민단체나 지역대표 등의 NGO가 형성돼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도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단체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듣기 어렵다. 일본 동경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작위로 뽑은 일반시민의 토론을 통해 도시행정과 도시경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도는 참신하고 유의미한 제도이다. '천만 상상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등 창의서울을 추구하는 민선 4기에 도입해 볼 만하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 3. 인력난 해소 위해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호주)

호주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 취업할 경우 최고 5000호주달러(약 370만 원)의 재정착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해안, 시드니 외곽지역 등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 다윈의 어업, 서부호주 브룸의 진주양식, 서부호주 및 퀸즐랜드주의 농업, 원예, 소매,接客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꾀하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이 서부호주 같은 고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근로자들에게 숙소도 알선하게 된다.

샤만 스톤 노동부장관은 "호주의 대도시 곳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실업률 지역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장기실업이 사회적 격리와 정신건강 위해(危害), 실업의 대물림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혁신적 사고 전환을 통해 일자리가 없는 대도시 지역에 연연하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마이클 래퍼 회장 또한 사람들에게 벌칙을 가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실업문제 해결에 더욱 성공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와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경우의 대책도 강구해야 하며, 귀향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Australian Online, 2006. 8. 30)

### 4. 다양한 언어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요사항 홍보나 캠페인을 실시할 경우 종종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물 절약 캠페인은 12개 언어를 사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는 홍보내용에 따라 집중 홍보대상 민족을 선정해 해당 언어로 홍보물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연 홍보의 경우 흡연율이 높은 중국인, 베트남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당 언어로 담배의 해독성을 알리는 광고를 제작해 홍보하며, 유방암 예방 캠페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외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www.mhcs.health.nsw.gov.au)

## 5.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와 지역 문화행사 연계 서비스 제공 (영국 웨이크필드市)

영국 웨이크필드市는 시청자가 정보를 선택, 검색할 수 있는 양방향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 지역 예술행사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문화 가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Wakefield Music Collective, Wakefield Jazz 등 정기 문화공연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직접 공연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인터넷 없이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및 3세대 전화기 사용자 등을 중심으로 문화정보 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324](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324))

### >>> 전문가 검토의견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대변된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넘나드는 프로슈머(prosumer)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분야 역시 문화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문화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문화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결국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본질적 가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적극 참고할 만하다. 특히 서울은 디지털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양방향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이 문화의 프로슈머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백선희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 한줄 뉴스

### <파리>

- 市 소재 건물의 80%에 2010년까지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fi)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을 설치키로
- 2006년 10월 7~8일에 제5회 '라 뉘 블랑쉬'(La nuit blanche) 문화축제가 6개 지역에서 열려
- 市정부의 핵심적인 활동 이미지를 담은 시정 관련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

### <호주>

- 뉴사우스웨일스州, 시드니 전철운행 지연 주범인 노후한 전동차 출입문을 1300만 호주달러(약 93억 원)를 투입해 전면 교체 및 수리 실시
- 부적절한 자료 열람 등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연방정부기관 공무원 100여 명 퇴출
- 외국인 여행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체 매출 감소로 관광산업 위기
  - 일본인 6%, 싱가포르인 13.6%, 말레이시아인 20% 등 외국인 여행객 계속 감소

### <북경>

-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확보를 위해 221억 위안(약 2조 7180억 원)을 투입하는 '0811 프로젝트' 실시
-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귀국 유학인재 제20호 창업단지가 석경산區에 정식 개원
  - 중국 최초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 유학인재 창업단지를 조성해 각종 지원책 제공
-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약품을 정부에서 일괄구매해 지역보건소에 염가로 제공
- '혁신과 문화 창의력'이란 주제로 제7회 북경 도서박람회 피탄공원에서 개최

## 6. 복지서비스에 대해 제3자 평가제 도입 (일본 아이치縣 헤키난市)

일본 전역에서 외부의 눈으로 보육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자 평가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3자 평가제도는 2004년에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시했으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 평가기준 설정에는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아이치(愛知)縣 헤키난(碧南)市는 2005년도부터 2~3개 보육원씩 심사를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85개이며, 평가 심사자가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제3자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朝日新聞, 2006. 9. 7)

### >>> 전문가 검토의견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는 보육의 질 향상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는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서울 시도 2003년부터 서울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제의 성공여부는 보육서비스현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평가지표와 공정한 평가과정, 적극적인 평가결과 공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시도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 7.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승인 (미국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의회는 2006~2007년 재정계획에서 100만 달러(약 9억 5700만 원)의 문화기금을 승인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오클랜드의 비영리단체나 개인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비영리조직과 개인 예술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고 학생들에게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금은 크게 4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업은 조직사업(Organization Project)으로 오클랜드 비영리조직의 예술 활동을 돕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업은 학교 예술 사업(Art in the Schools)으로 오클랜드 공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예술 관련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업은 개별 예술가 사업(Individual Artist Project)으로 지역 공공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각 예술가의 활동 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업은 조직 지원(Organizational Assistance)으로 비영리조직 자체의 발전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비영리조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기금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도시의 경제·사회적인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시정부의 지원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www.oaklandnet.com/2006CulturalFundingGrantsAwardedMediaRelease.pdf](http://www.oaklandnet.com/2006CulturalFundingGrantsAwardedMediaRelease.pdf))

### >>> 전문가 검토의견

도시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우선 예술 생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조직을 통해 시행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적 속성인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다. 또한 높은 문화적 소양은 어릴 때의 문화적 경험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의 문화예술 체험은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클랜드市에서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비영리조직의 예술활동 및 공립학교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 제공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 문화정책 역시 문화적 생산과 소양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백선희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 8. 사회융합과 가난 타파를 위한 ‘사회소외 예방팀’ 설립 추진 (영국)

영국 블레어 총리는 영국 인구 중 1100만 명이 가난으로 인해 ‘사회소외 현상’을 겪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외 예방팀’(Social Exclusion Taskforce)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협회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소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주택문제의 경우 현재 100만 가구가 새로운 주택 혹은 주택 관련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Planning, 2006. 9. 7)

## 9. 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 연습 행사 개최 (베를린)

2006년 9월 9일 베를린에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날’을 맞이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 및 보행 장애를 가진 승객들이 버스 승·하차를 연습할 수 있는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됐다. 이외에도 45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 장애를 가지지 않은 예술가들의 무대행사와 콜레스테롤 및 혈당 무료 측정 등이 있었다. 베를린의 한 피트니스 센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나의 스포츠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부착된 램프를 통해 버스에 승차하려면 얼마나 능숙해야 하는지도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강당에 어린이들이 무료로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을 마련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참여도도 높였다.

([www.bvg.de/index.php/de/Bvg/Detail/folder/295/id/114124/name/Tag+f%26uuml%3Br+Menschen+m%26it+und+ohne+B+hinderungen](http://www.bvg.de/index.php/de/Bvg/Detail/folder/295/id/114124/name/Tag+f%26uuml%3Br+Menschen+m%26it+und+ohne+B+hinderungen))

## 10. 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집행,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아 (영국)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의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시행된 이 법은 2004년 10월까지 장애인 이용시설 완비 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다음 단계인 ‘2005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1층에 민원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Shop을 도입해 민원 업무와 장애인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한 원원 전략도 평가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 2006년부터는 법정 계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조사해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강화된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27&mode=thread&order=0&thread=0](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27&mode=thread&order=0&thread=0))

### 한줄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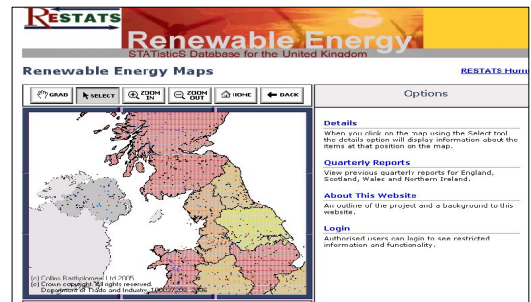
#### <미국>

- 샌프란시스코市, 도시 범죄 예방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거주지에 감시 카메라 70대 추가 설치
- 오클랜드市, 2006년 9월 22일에 대기오염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해 ‘차 없는 날’(Car Free Day) 행사 실시



## 11.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지도 작성 (영국)

영국 정부는 최근 에너지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전역에서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든 지역의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수력발전소, 바이오연료 프로젝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온라인 센터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건설, 실행단계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

(www.rudi.net/node/10338)

### >>> 전문가 검토의견

선진국일수록 정부 및 시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풍력자원 지도를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은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효율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서울시(맑은서울추진본부)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화해 공개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2.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미국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의회는 2006년 3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2020년까지 오클랜드市를 쓰레기가 전혀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오클랜드市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도시 내 쓰레기를 50%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 재활용품 시장의 활성화 덕분이다. 오클랜드市가 채택한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사실 2010년까지 쓰레기의 75%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쓰레기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순환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www.oaklandpw.com/Page749.aspx)

### 13. 최신 환경규제 적합차량의 조기 시장 투입 요청 (동경)

동경도는 8개 都縣市(東京都, 埼玉縣, 千葉縣, 神奈川縣, 横浜市, 川崎市, 千葉市, 埼玉市)와 자동차 NOxPM법에서 정한 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8개 都府縣(東京都, 大阪府, 埼玉縣, 千葉縣, 神奈川縣, 愛知縣, 三重縣, 兵庫縣)과 공동으로 환경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자동차 메이커 4대 기업에 최신 환경규제 적합차량의 조기 시장 투입 등을 요청했다. 자동차NOxPM법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 지역에서의 총량 삭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동경都, 사이타마(埼玉)縣, 치바(千葉)縣 및 가나가와(神奈川)縣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조례를 통해 디젤차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개 都縣市가 연대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8개 都縣市의 2005년도 대기감시 결과에서는 부유입자상 물질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치가 저하되는 등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선도로 주변의 부유입자상 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고농도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9/20g94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9/20g94200.htm))

## 도 시 교 통

### 14.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환 프로젝트 'Smart Travel Sutton' 시작 (런던)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 서튼區(Sutton Council)는 파트너십을 맺고 'Smart Travel Sutton'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 영국 최초로 지역사회의 전 교통체제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은 줄이고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도보여행은 장려, 확대할 계획이다. 3년간 500만 파운드(약 90억 원)를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학교에 교통전문 상담원을 뒀 학교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지역인 서튼區는 런던 내 여러 자치구가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발됐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195](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195))

### 15. 런던교통공사, 당초 버스 승차권 인상률의 1/3만 인상 (런던)

연초마다 교통요금 인상은 일반 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2년 전 런던市는 2차대전 이후 건설된 낙후 교통시설을 수리하고 보완하는 교통기반시설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10%의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 11일 런던市는 수정된 인상률을 발표했다. 그간 다양한 경영혁신 노력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서비스 증대 등으로 교통공사 재정이 건실해짐에 따라 2007년 버스요금을 당초 계획인 10%의 1/3밖에 안 되는 3.8%만 인상하기로 방침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런던교통공사는 2006년 11세 이하 어린이의 공공 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전격 실시했으며, 2007년에는 무료 혜택을 18세 학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16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169))

## 16. 市의회, 템스강의 교통기여도 제고 촉구 (런던)

런던市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템스강을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으로뿐만 아니라 교통기반시설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런던의회 교통분과는 템스강 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한 ‘런던의 잊혀진 도로’(London's forgotten highway) 보고서에서 교통 정체를 완화하거나 분산하기 위해 하천교통 체제의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근 보트에 대한 홍보 부족과 관광용 보트 서비스에 밀려서 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보트용 부두를 민자 유치를 통해 신설하는 안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런던교통공사 산하 조직인 London River Services(LRS)가 Thames Clippers사에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통근 보트를 일일 2500명, 연간 52만 4700명이 이용하고 있다.

(www.london.gov.uk/assembly)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_a.jsp?releaseid=9194)

## 17.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방안 발표 (베를린)

독일 교통단체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베를린 도시개발부 장관인 융에-라이어(Junge-Reyer)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비전 제로(Vision Zero): 독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방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매년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5000명(2005년 통계: 5400명)이 넘고,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1991년 198명이었던 사망자가 2005년에는 6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자전거나 도보와 관련돼 있고 주요 피해 집단은 아동, 청소년, 청년층과 노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은 교통시스템의 안전성이 더 향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도 사망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취지다. 도시개발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를린 내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2010년까지 최소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를린市 보도자료, 2006. 9. 7)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9/nachricht2428.)

## 도시계획·건설·주택

## 18. 경관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법 강화 필요성 대두 (영국)

영국의 농촌보호운동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설정책이 지역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방정부가 개발 압력으로 인해 경관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대규모 구조물인 풍력발전소나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 경관보존지구와 같은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Regeneration & Renewal, 2006. 9. 1)

## 19.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토지소유 계획안’ 제안 (영국)

영국 보수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커뮤니티 토지소유 계획안’(community land ownership scheme)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임대주택과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커뮤니티와 공공 토지 트러스트’(community and common land trust)의 설립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로의 주택정책과 사회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권 이양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혜택을 주고 주택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보수당 관계자는 전했다.

(Regeneration & Renewal, 2006. 9. 8)

## 20. 도시 재개발이 이웃지역에 악영향 (영국)

영국 정부는 북부지역 개발과정에서 도시 간의 경쟁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이 서로간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이 보고서는 리버풀(Liverpool)과 맨체스터(Manchester) 사례를 설명하면서 집중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와 전문인력 및 경제적 힘이 강한 도시가 그렇지 못한 도시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영국 북부지역 개발에 도시 간의 협력과 제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도시간 균형 잡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lanning, 2006. 9. 8)

## 21. 주요 거리 정비 사업 실시 (파리)

파리市 거리가 미화와 시민 편의를 목적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클리쉬-호쉬슈아흐(Clichy-Rochechouart), 마젠타(Magenta) 대로, 장-조헤(Jean Jaurès) 거리 개선 사업이 2006년에 대부분 완성될 계획이다. 새롭게 공공공간을 늘려 도보와 자전거 안전거리 등을 조성하는 도시정비 사업은,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고 거리의 미관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마젠타 대로의 대중교통 정류장과 상점 정비,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은 파리북역 광장의 도시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장-조헤 거리에는 약 4km의 자전거도로, 400m 가량의 버스 차로, 3000㎡의 화단, 60개의 도보 안전통로, 42개의 새로운 배달차량 특별주차공간이 생길 예정이다.

(Paris change, 2006년 9월호)

## 22. 쿼리 대학에 새로운 아트리움 건물 완공 (파리)

2만 5000㎡ 면적의 새로운 아트리움(Atrium) 건물이 파리시 쥐시외(Jussieu)에 있는 피에르와 마리 쿼리 대학 캠퍼스 내에 자리잡게 됐다. 로마시대 모든 방문자에게 개방되던 주택의 중심공간이었던 아트리움의 개념을 살려 이 건물도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의 과학 및 의학의 중심공간을 만드는데 건축적 의미가 있다. 4000여 명의 연구원과 교수, 그리고 3만 명의 학생들이 아트리움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2006년에 일반 공사가 끝나는 이 건물은 9500㎡의 프랑스 최대 공사현장 중의 하나로, 건물 내부는 밝고 인간공학적인 작업공간으로 구성돼 각 실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



(Paris change, 2006년 9월호)

### 한줄 뉴스

영국, 2004년 이후 매년 0.5%씩 인구가 증가해 남동부 지역에 12만 호의 주택 공급 필요

- 노년층의 증가와 이민자의 유입이 인구증가 요인

#### <런던>

- 시청사에 310만k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약 3만 톤을 줄일 수 있는 태양열 발전판 설치
- 시민들의 요구로 루이섬, 브롬리 등 5개 區에 방문판매 금지구역 350개 설정
- 사회정책 연구기관 'Joseph Rowntree Foundation'의 런던 동부 뉴햄(Newham) 지역의 사례연구 결과 녹지, 시장, 광장 등의 공공공간이 지역주민과 다양한 인종간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 <베를린>

- 문화재보호단체(DVN)와 지하철연합이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트램과 지하철을 타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환경교육센터인 자연학교들이 초등학생이 숲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숲속에서의 경주 모험: 조심하면서 함께' 행사 개최